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

**김용하**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2년 5,158만 명에서 2070년에는 3,766만 명, 노인인구 비율은 2022년 17.5%에서 2070년에는 46.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대 초 현재 1위인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으로 정점(頂點)을 찍은 뒤 2060년에는 2,066만 명이 된다. 인구구조 노령화는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율에 영향을 받는데, 평균수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접근해 있고, 낮은 출산율이 결정적이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 명으로 신기록을 경신했다.

염세주의자들은 2750년에 한국 인구가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미래를 비관하고 있다. 『2018 인구 절벽이 온다』의 저자인 미래학자 해리 텐트는 세

계 각국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오는 상황인 인구절벽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는 같은 시기에 한국에도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나라에서 총인구수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인구 비율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낮은 나라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국가와 같이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미리 찾아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국가도 있다. 이들 국가는 저출산을 극복해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 시스템을 재구성하는데 성공했다. 즉, 장수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으로 생기는 고령화 요인 외에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안정적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2057년 적립기금 고갈이 전망되었다. 이른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불균형 연금구조에서는 적립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고, 특히 합계출산율이 0.81명에 불과하고 2070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46.4%에 이르는 초고령 국가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나마 국민연금의 2057년 재정 문제는 미래형이지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 문제는 과거 및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각각 904조 6,000억 원, 233조 6,000억 원으로, 2021년의 명시적 국가채무 967조 2,000억 원보다 많다. 국고 보전이 없으면 현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매년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사학연금도 5차 재정계산 결과 2049년께 적립기금이 고갈될 전망이어서, 3대 직역연금 모두 수술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재정도 문제다.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64조 5,768억 원이었던 진료비가 2021년 93조 5,011억 원으로 1.45배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진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50조 845억 원임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전체로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20~2060년 건보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누적 적자가 2040년 678조 원, 2050년 2,518

조 원, 2060년 5,765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율을 지출 증가에 상응하여 2022년 현재 소득 대비 6.99%에서 24% 내외 수준으로 인상해야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의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자료는 2030년 3조 8천억 원, 2040년 23조 2천억 원, 2050년 47조 6천억 원, 2060년 63조 4천억 원, 2070년 76조 7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021년 소득 대비 0.79%인 장기요양보험료를 2060년 6% 내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2060년대에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합계만 해도 소득 대비 30% 수준이어서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사회보장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20년 12.1%에서 2030년 15.5%, 2040년 19.7%, 2050년 24.1%, 2060년 27.3%로 변동할 것이라고 한다. 2019년 기준으로 프랑스가 31.0%, 독일 25.9%, 영국 20.6%, 스웨덴이 25.5% 등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2060년이 되면 이들 국가의 현재 복지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들 복지 선진국의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20% 수준의 복지 수요에 상응한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2060년 노인인구 비율은 43.8%로 이들 국가의 현재 노인인구 비율보다 2배 내

외 높아져 복지 수요에 비해 복지 재정 지출 수준은 낮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있다. 더욱이 현시점에도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동, 장애인, 청년까지 현금복지뿐만 아니라 돌봄을 비롯한 서비스 복지 욕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2022년도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50.2%로 늘어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거역하기 어렵다. 노인인구 증가를 경제사회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기대수명의 연장은 축복이어야 하고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미래를 불안해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보면 올해 11월 80억 명을 돌파하고 있는 인구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막연히 걱정하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저출산·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한시바삐 재편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인구 확대기에 만들어진 경제사회 구조를 인구 감소기에 적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또한 인구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도 인구 중립적 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은 저성장에 기인하는 팍팍한 생활 형편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생산 및 고용구조의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 갈등 증폭 등으로 인해 경제 수준에 상응하는 국민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저성장 국면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무리한 단기 성장 목표보다는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내실 있는 발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혁신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경제 전반의 큰 흐름으로 가시화되기 이전에는 경제사회제도 전반을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도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있는 사고방식과 습관도 바뀌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적 측면에서 재정수지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포럼의 초점 원고에서 제기된 정책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